

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①

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가려진

# 연금개혁 바로보기



Q. 갑자기 국민연금 뉴스가 왜 이렇게 넘쳐나요?

A.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 때문입니다.

Q. 재정계산이 뭐 길래...!? 내 노후, 문제가 생긴 건가요?

국민연금 재정계산?

# 국민연금이 5년마다 받는 건강검진!

국민연금 '고갈' 전망..시민들 '연금 개편' 의견 분출

김진호 입력 2018.08.18. 20:20 수정 2018.08.18. 20:39 댓글 137개

MBC

국민연금 개선안 공개..적립금 2057년 고갈

최유찬 입력 2018.08.18. 07:28 수정 2018.08.18. 09:39 댓글 7개

[국민연금 개혁]국민연금 빨라진 고갈시계...보험료 '즉시인상 Vs 단계적 인상'

기사입력 2018-08-17 14:00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· 설정

국민연금 고갈 2057년...보험료 내년부터 2%p, 향후 10년 4.5%p 단계적 인상

기사입력 2018-08-17 14:02 최종수정 2018-08-17 14:46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· 설정

국민연금 재정계산

“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”을 수립”



의무가입 없애고  
원하는 사람만 해!

차라리 폐지하고  
내 돈 돌려주세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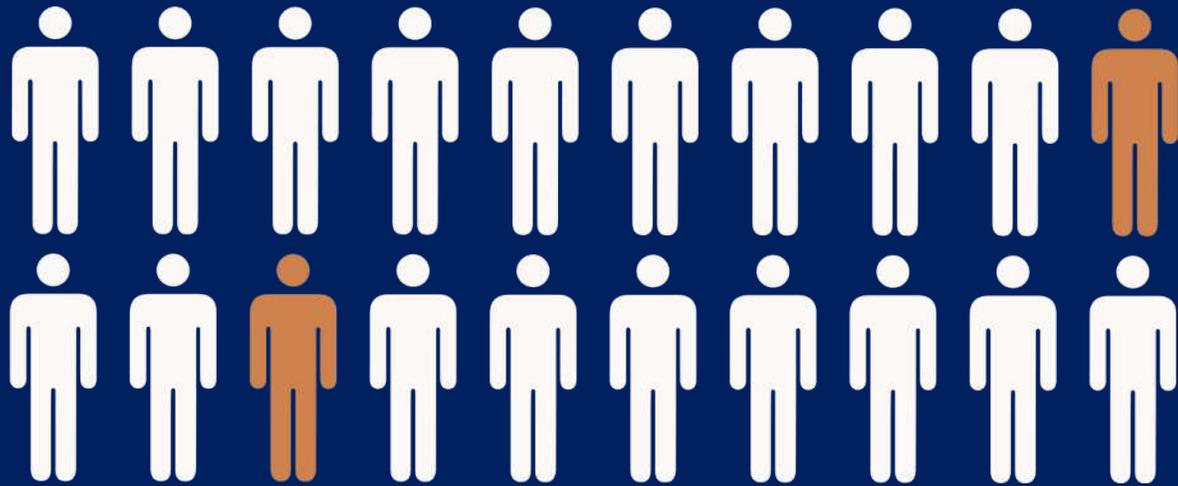
저는 이제 서른인데,  
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?

**우리 노후, 정말 괜찮나요…?**

5년마다 찾아오는 기금고갈의 공포

국민연금 폐지가, 기금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축소가

## 해답인가요?



각자도생  
各自圖生

「명사」 제각기 살아 나갈 방도를 꾀함

노후 빈부격차와 사적부양 부담 심화

**“각자도생”은 우리의 해답이 아닙니다**

"그런데 맞습니다"

# 국민연금, 재정위기라고 하는데…?



30년



4.8년



3.8년



3.3년



1년

「현재 적립된 기금만으로  
연금급여 지급이 가능한 기간」

공적연금 제도가 성숙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

**5년 이내 연금급여에  
해당하는 기금만 보유** 아예 기금을 쌓아 놓지 않기도…

"그런데 맞습니다"

# 어쨌든 기금이 없으면 내 연금은...?

Q

기금이 없으면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?

A

독일 등 많은 유럽국가들은 연금보험료 수입에 일반조세 재원을 더하여 연금을 문제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

Q

그러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나요?

A

(2013년 기준)  
EU 28개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**18%**일 때 이미 GDP대비 **11.3%**를 공적연금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. 한국의 2060년 노인인구 비율은 **41.2%**에 달하지만 예상 공적연금 지출은 GDP대비 **11%** 정도입니다.  
(기초연금 등 포함)

국민연금 기금고갈은 국민연금 제도의 “파산”이 아니라  
**부과방식**으로의 “**전환**”입니다

※ 부과방식 | 그 해 필요한 연금을 그 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방식



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다!

발상의 전환으로 미래를 준비하자

국민연금 기금 고갈까지 “40년” (4차 재정계산 결과 2057년 소진)

**= 차근차근 대비할 시간 “40년”**

지금 바로 시작하는  
연금을 연금답게 만드는 일!



# 1 국가책임 강화

지급보장 명문화와 사각지대 해소

# 2 노후소득보장 강화

용돈연금 굿-바이

# 3 인구감소 대응

저출산, 불안정 노동 해결 위한  
국민연금 제도 외적 사회정책

**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 
온 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로!**



노동자와 자영업자, 청년과 노인, 정부와 시민

**모두가 함께하는  
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합니다!**

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②

불안과 불신에 휩싸인 국민연금,

**국가가 보장하는  
국민연금을 원한다**



# 불안

국민일보

청년도, 노년도 불안... '불신의 늪' 빠진 국민연금

12면 TOP | 기사입력 2018-08-20 04:02 | 기사원문 | 스크랩 | 본문듣기 · 설정

서울신문

전문가들 "연금개편, 국민 불신·오해부터 해소해야"

기사입력 2018-08-17 14:11 | 최종수정 2018-08-17 14:11 | 기사원문 | 스크랩 | 본문듣기 · 설정

부산일보사

"죽기 전 받겠나!" 국민연금 개혁안 못매

기사입력 2018-08-12 22:32 | 최종수정 2018-08-12 23:03 | 기사원문 | 스크랩 | 본문듣기 · 설정

jtbc

'불신' 적립하는 국민연금... '국가 지급 보장'도 빠져

기사입력 2018-08-21 08:40 | 최종수정 2018-08-21 10:38 | 기사원문 | 스크랩 | 본문듣기 · 설정

# 그리고 불신

우리 노후,  
정말 국가가  
책임지나요?

정말 그렇다면,  
법으로 약속하고 있나요?

# 이미 국민연금법에 “국가의 책무” 항목이 있는데…?

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2(국가의 책무)

“  
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 
안정적·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 
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 
”

그런데 뭔가 애매하다!?  
“보장한다!”고 말하면 될텐데



# 국가의 지급보장을 위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지만

국민연금법 개정안 중 제3조의2(국가의 책무)  
2017년 4월 13일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

“  
국가는 이 법에 따른  
급여의 안정적·지속적인  
지급을 보장한다.  
”



이 한 줄 바꾸자는 국민의 요구는  
국회 본회의의 문턱도 못 넘고...

# 전문가A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…?



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 
국가 총당부채가 늘어나고  
국가 신용도가 낮아져요

## NO! 지급보장 명문화 ≧ 국가부채 증가

「연금 회계처리지침」에 따르면,  
국민연금은 총당부채 인식대상에서 제외  
군인·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만 인식 ※ 군인·공무원은 국가가 “고용주”의 입장이기 때문

「연금 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」 제정 당시에도,  
국민연금은 “국제적 비교 관점을 고려하여 관련된  
총당부채는 인식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”

# 전문가A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던데요…?



해외 공적연금 사례를 보더라도  
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는  
나라는 없습니다

## NO!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책임 명시



독일은 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 시 “연방”이 부족한 만큼  
유동성 보조를 수행함을 보증

독일 사회법전 제6편 공적연금보험편 214조 참고



일본은 매년도 재원의 1/2 를 국고로 보조하도록 명시하여  
기금부족 이전부터 연금 지급 위한 국가책임 강조

일본 국민연금법 85조 참고

국민의 신뢰 없이 갈 수 없는  
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의 길

**범**

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 
으로 약속합니다

무너진 국민의 신뢰 회복  
첫걸음은 국가책임의 강화입니다

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③

용돈연금과 빈곤한 노인의 나라

노인을 위한  
나라는 없다...?!



#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

##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압도적 1위

한국 47.7%(2017) | OECD 평균 12.1%(2014)

##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압도적 1위

인구10만명 당 한국 54.8명 | OECD 평균 18.4명(2013)  
한국 노인 자살 원인 1위 “경제적 어려움”(40.3%)

#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니다

# 노인이 되면 빈곤을 만나는 건 당연하다...?



61.3% → 49.6%



70.1% → 12.1%

연금 미포함  
노인빈곤율

연금 포함  
노인빈곤율

※ OECD통계를 토대로 사회공공연구원(2015)

**NO! 연금제도가 제 역할을 하면  
노인빈곤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**

# 하지만 대한민국 노인이 받는 연금은 최소생활비의 절반 수준



노후 최소생활비 103.0만 원  
노후 적정생활비 145.7만 원

개인 기준, 국민노후보장패널(2016)

신규수급자가 받는  
월 수금액 52만 원

2017년 기준, 실질소득대체율 24% 적용

## 납부자에게도, 수급자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는 '용돈연금'

# 문제는

# 점점 낮아지는 소득대체율!



## 소득대체율이 뭐길래...?

### 40년 가입한 사람의 평균 월소득액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

소득대체율이 40%라면, 월 200만원을 벌던 노동자는 연금으로 80만원을 받는다는 뜻!



## 결국 나의 연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!

###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70%에서 2028년 40%까지 계속 하락하는 중

2018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%

소득대체율 40%면 평균소득자의 경우 81만원인데  
적당한 것 아닌가요? 기초연금도 있잖아요!

40%는 “40년” 가입 기준이에요 ㅠ ㅠ  
실제 평균 가입기간은 17.4년,  
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4%(약 52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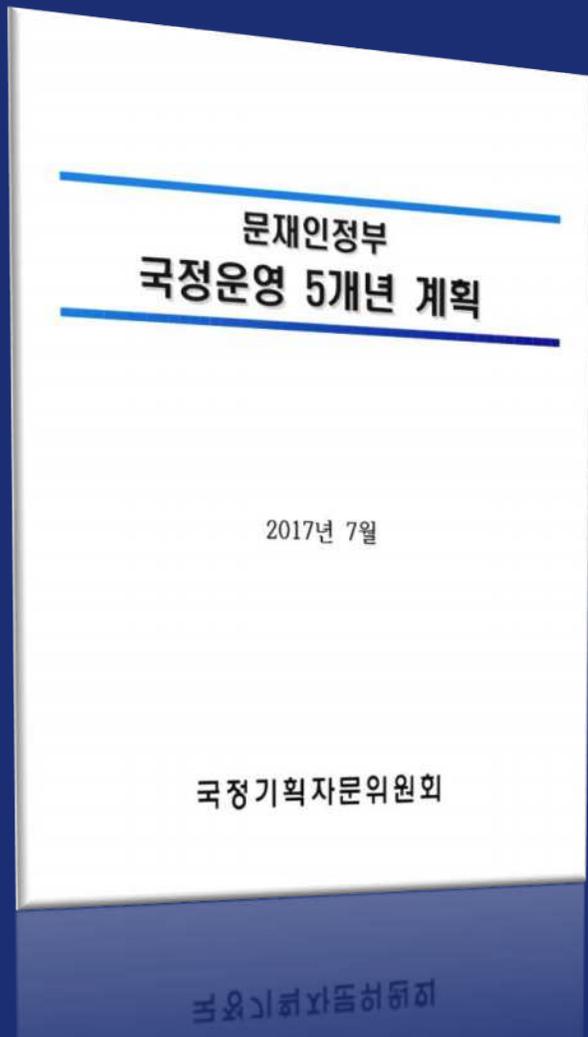
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가입기간 확대만으로 연금을 늘리는 것은 한계  
한국 노인의 최소생활비 103만원을 위해서는, 기초연금을 받더라도

**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최소 45% 이상 필요**

※ ILO,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60%(40년 기준) 권고  
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NO.102(1952), 장애·노령·유족급여에 관한 협약NO.128(1967)

OECD, 한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행 수준(46%) 유지 권고  
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6`

# 사회적 합의를 통한 소득대체율 인상 정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



“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
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 
재정계산과 연계하여  
사회적 합의하에 추진”

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中



가난한 노인의 나라,  
더 이상의 **연금 삭감**은  
막아야 합니다

이제,  
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 
**사회적 논의**를 시작합니다

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④

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

모두를 위한  
연금은 가능한가



#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 지 20년

1998년 도시지역으로 확대



## 국민연금 사각지대

실업 등 소득상실로 인한 납부예외 및  
장기체납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 
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 
노후소득보장을 위협받는 국민

(보건복지부, 국민연금공단)

#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

장기체납 및 납부유예 470만 명



짧은 근속기간, 낮은 임금 “불안정 노동”의 그늘  
**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 36%(정규직 83%)**



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영세 자영업자,  
프리랜서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 
**지역가입자 중 약 25%가 국민연금 장기 체납**



분명 고용되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 
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  
**사업장 가입(보험료 절반만 부담) 불과 6.6%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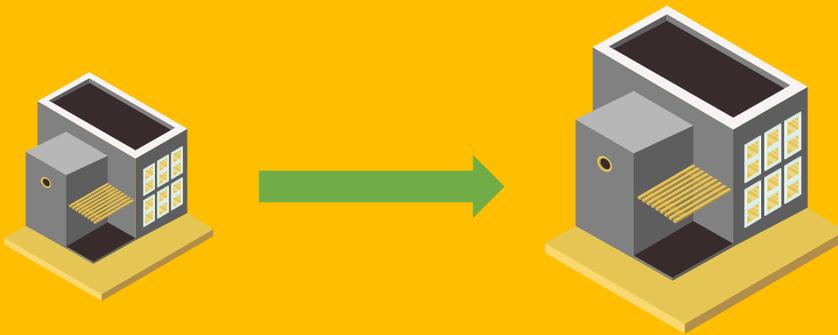
**노동시장에서 불안정이 노후생활의  
불안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음**

모든 것이  
연금이  
되느냐  
없을까?

이것부터 시작하자 ①

# 두루누리 지원과 크레딧 확대!

**두루누리**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



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 
(현행 10인 → 30인+)

보수기준 상향 및 명문화 필요

**크레딧** 출산, 병역 등 보험료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



첫째자녀부터 가입기간 인정

군복무 기간 전체 인정

재원은 기금이 아닌 국고로 사전적립!  
(후세대 부담 완화)

이것부터 시작하자 ②

#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!



“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지만  
9% 전부를 납부할 형편이 안돼요”

“농어민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 지원을  
받고 있어요”

※농어업인 체납률 12.6%  
도시지역 체납률 42.1%



이것부터 시작하자 ③

#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가입 전환!



“고용노동부장관에게 (중략)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」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.”

2017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



독일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유사자영업자로 간주될 경우, 여타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노동자와 **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납부함**

#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재원마련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



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 
**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 
절감액의 20%를 국민연금  
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도록 합의!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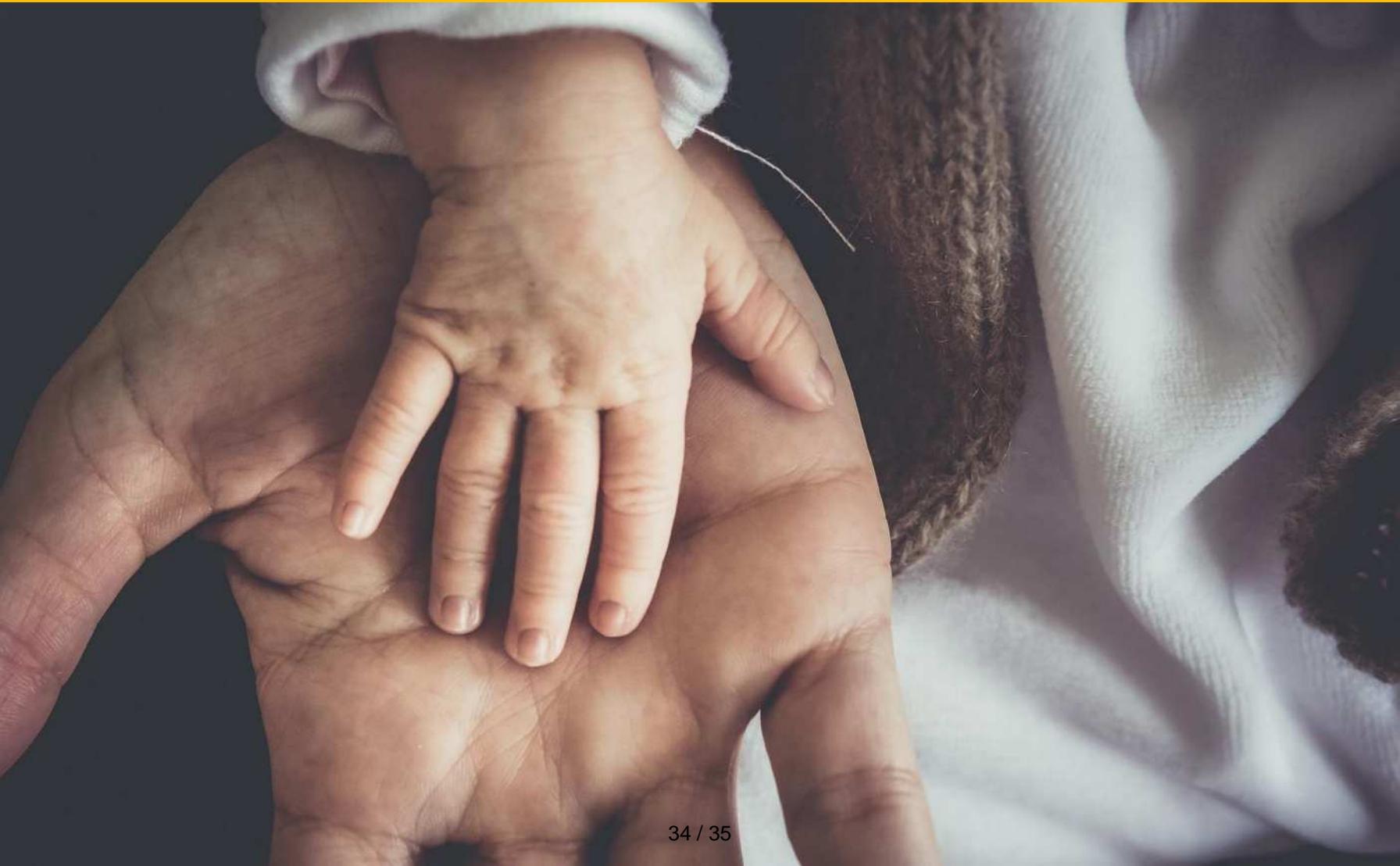


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 
**국민건강보험은 총 재정의  
일부를 국고로 지원**  
(연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%)

**연금 사각지대 해소는**

현재의 불안정 노동이 미래세대에게  
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

**국가와 현세대의 책무입니다**



# 온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

- ① 연금개혁 바로보기  
4차 재정계산과 연금개혁의 방향
-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 
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
-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
국민연금 적정 소득대체율 찾기
- ④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 
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